

제356회 국회  
(임시회)

# 국회 본회의 회의 의록

제 3 호

국회 사무처

2018년2월1일(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계속)

## 상정된 안건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계속) ..... 1

(10시02분 개의)

○의장 정세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계속)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어제 당부를 드렸는데…… 우리 의회의 품격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잘 노력합니다.

○김성태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들이 다시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나라다운 나라가 맞느냐고. 국민들이 고개를 가로젓고 있습니다.

제천 화재참사 불과 한 달여 만에 밀양에서 연이은 대형 참화가 또다시 발생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우왕좌왕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이 만들겠다고 안전한 대한민국 이냐고 성난 국민들이 따져 물었지만 집권 여당

은 남 탓하기에 급급한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나 동네 사장님들 한숨은 깊어지고 알바생,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새해 벽두부터 거리로 내쫓기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1%에 머물던 물가상승률이 지난 한 해 두 배가 넘게 올라도 정부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허공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핑계로 김정은과 현송월이 온 나라를 쥐락펴락 해집고 다녀도 정부는 꿀 먹은 병어리마냥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한미관계, 한중관계, 한일관계 불협화음에 굴욕외교, 왕따외교 이어져도 정부는 남의 일인 양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습니다. 오직 단 하나, 올해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적폐청산 수사만큼은 철저히 하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둘러앉아 밥 먹으면서 대구시장후보 잘 내서 한국당을 문 닫게 만들자는 것이 바로 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국민안전, 민생복지, 경제와 외교, 국가안보 다 내팽개쳐도 오로지 정치 보복에만 열을 올리고 선거에만 매진하겠다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인 것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들겠다고 했지만 점점 피로감만 쌓여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정권입니다.

적폐청산 수사 철저히 하겠다고 하면서 권양숙 여사 640만 불은 왜 꿀 먹은 병어리입니까? 이재명 성남시장 네이버 협찬 기부 40억 자금세탁 의혹 수사는 옛 바퀴 먹었습니까? 차병원 33억, 농협 36억, 두산 42억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것이 이 정권 인사들의 현주소이고 그것을 애써 모른 척하고 눈감고 있는 게 검찰의 현실입니다. 이렇고도 적폐청산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되는 사회적 참사,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청년실업, 자고 나면 올라가는 물가에 시름하는 국민 앞에 지하철 광고판에서 만면에 웃음 짓는 대통령 생일 광고는 틀림없이 올 연말 대한민국 광고대상에 지목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참으로 감축드립니다.

그것도 모자라 비싼 돈 들여 뉴욕 타임스퀘어에 대통령 광고나 내는 이 나라가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입니까? 이게 국민이 행복한 나라입니까?

국민들이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가 맞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김 씨는 새해 벽두부터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비단 김 씨뿐만이 아니라 이 아파트 41개 동 94명 경비원 전원이 바로 어제 자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일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6.4%, 한 시간 일한 대가로 최저임금 7530원을 받게 됐다고 잠시나마 좋아했지만 노동자들은 오히려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그 당위의 명제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레토릭만으로 포장된 문재인 정부의 정책 포퓰리즘이 감당하기에 현실은 너무도 치열하고 디테일은 여전히 부족하기만 합니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노동자 263만 7000명 가운데 67.8%가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문제를 이들과 600만 자영업자의 제로섬 게임으로 만들어 버린 이 정부의 정책적 미숙함과 무책임은 도대체 무엇을 먼저 탓해야 할지 할 말조차 잃게 만들어 버립니다.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정부가 만든 일자리 안정기금을 이용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안이한 현실 인식에는 숨이 턱턱 막힐 지경입니다. 이제 와서 신청률 0.7%에 불과한 있으나마나한 일자리 안정기금 신청서를 들고 애꿎은 공무원들만 이 엄동설한에 이리저리 뛰어보아야 이미 물은 얼질러져 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업종별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과 숙식비를 포함해 달라는 중소기업인들의 청원에도 총리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서 최저임금 결정에 정부 권력의 정치적 개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노동자의 정당한 건강권과 휴식권 확보는 우리 사회가 쟁취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OECD 공식 통계로만 연간 2069시간에 달하는 우리의 노동시간은 가히 살인적인 수준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깊이 인식한 우리 국회도 여야 할 것 없이 노동시간 단축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해왔고 어렵게 여야 간에 합의를 이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견어찬 게 바로 민주당 내부의 이견 때문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벌, 대규모 사업장이 아니라 493만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일수록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가는 계층화되어 있고 휴식은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집집마다 걸려 있는 달력의 빨간날을 정당하게 쉴 수 있는 권리가 우리 사회에 널리 공유될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빨간날을 쉴 수 있다는 그 당연한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불합리한 차별과 불평등은 아직도 우리 사회 저변에 만연해 있습니다.

공공기관, 대기업 노조가 조직돼 있는 전국의 10.2% 사업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90%를 차지하는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그 흔한 빨간날조차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이 빨간날, 그런 빨간날이 아니라는 이 엄혹한 사실을 우리 사회가 새삼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는 근본 목적은 무엇보다 휴일을 휴일답게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추석이나 설 명절조차 자신의 연차 휴가로 쪼개어 쓸 수밖에 없는 전국의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1000만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빨간날의 공휴일을 되돌려 주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는 빨간날의 공휴일이 전 국민에게 차별 없는 빨간날이 될 수 있는 세상, 그 누구도 차별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위적인 자본시장 임금 개입으로 시장질서가 왜곡된 이 엄중한 상황을 하루빨리 시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사회적 협의기구인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노사정 공익위원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이 최저임금 체계를 왜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했습니까? 즉각 반성하고 시정해야 됩니다.

비정규직 문제 또한 우리 사회가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 사흘 만에 인천공항에 찾아가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습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준비 없는 깜짝쇼가 허울뿐인 빛 좋은 개살구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이미 남의 일이 되어 버린 5만 명의 기간제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제로가 아니라 비정규직 그대로인 노동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고 결국 무늬만 정규직인 전환 대상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상실감도 여전하기만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를 말하기에 앞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심각한 사회적 격차 문제로 제기된 비정규직 문제의 근원은 결국 김대중·노무현 정부라는 점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른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계기가 되었던 1998년 입법과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던 2006년 입법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솔직한 입장 표명과 자기 고백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시간·저임금·불안정 노동은 여전히 우리의 노동 현실이고 모든 종류의 차별이 해소되지 않는 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해소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불평등한 사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불평등한 사회는 생산적이지도 않습니다.

살인적인 청년실업에 금수저·흙수저로 낙담하고 자조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는 사회는 결코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기성세대와 미래세대의 격차가 커지는 사회는 결코 생산적일 수 없습니다.

불평등이 초래하는 사회적 양극화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갈등이 깊어지면 경제적 생산의

효율성도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통합과 갈등 해소, 타협과 차별의 시정에 앞장서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사회개혁 정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장시간 노동을 바탕으로 하는 한국의 GDP가 막대한 노동 투입량으로 지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입량 대비 생산성은 OECD 최하위 수준이라는 지적은 우리 사회의 생산시스템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노동시간은 OECD 상위 50% 국가 대비 40% 긴 반면 노동생산성은 OECD 상위 50% 대비 55%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OECD는 한국의 상위 10% 노동자가 하위 10%보다 4.5배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은 낮고 불평등은 높은 것이 지금 우리의 사회적 생산시스템입니다. 생산성의 측면에서 상당한 노동 투입량에도 불구하고 높은 사회적 갈등과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적 지출이 결국 생산성의 비효율로 귀결되고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경제적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지속 성장의 열쇠가 생산성의 향상에 있는 것이 라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회 지출을 늘리는 방향을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밀양 화재참사에서 또다시 이 정권의 무능을 봤습니다. 29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제천 화재참사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렇게 또다시 대참사가 날 수 있는 것인지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천에 이어 밀양에서도 또다시 안타깝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저는 안타깝다고 말하는 문재인 정권이 더 안타깝습니다.

지난 23일 정부가 이른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한 지 불과 사흘 만에 이런 대형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말만, 겉만 번지르르한 보여 주기 정치, 이미지 정치, 필요없습니다. 제발 ‘이미지 쇼통’ 그만하시고 국정 운영에 진정성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무능한 아마추어 정권이라도 진정성마저 없어야 되겠습니까? 국민 앞에 보여지는 것, 눈속임 정치, 이제 그만 하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보수 정당 궤멸만을 꿈꿔 왔던 이 정권이 얼마나 국민 안전에 소홀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 바로 밀양 세종병원 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생명권조차 지키지 못하는 이 무능한 정권의 국정 운영 방식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포항 지진,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 제천 화재 참사, 용인 타워크레인 전복사고, 포항제철소 질식사고 그리고 밀양 대참사, 이 계속되는 사건사고에 정부는 무능 말고 보여 준 것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9개월 동안 무려 4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2월, 1월, 이 두 달간에 이런 사회적 참사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 나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정권이 바로 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각종 사건사고가 날 때마다 재발 방지와 후속 대책을 언급했지만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정권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기에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국정 쇄신을 위해 문책 인사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정권에서 초래된 참사는 비단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근본적으로 더 큰 참사는 바로 이 어설픈 아마추어 정권이 빚어내고 있는 정책참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뒤 안 재고 퍼 주기 포퓰리즘으로 시작된 문재인 정권의 정책참사는 급기야 갈팡질팡 결정장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좌우되는 포퓰리즘으로 사회적 갈등은 급기야 오락가락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도박장으로 만들어 버린 가상화폐 시장, 유치원 학부모들을 사교육비 걱정해 한숨짓게 했던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북한 핵과 미사일을 머리에 이고 있는 이 마당에 그래도 군복무기간은 단축하겠다는 국방부, 도대체 이 정권의 설익은 정책, 아니면 말고 식의 정책은 끝이 없습니다. 어디까지 봐줘야 하는 것입니까?

더 이상 무책임이 난무해서는 안 됩니다. 어설피고 선부른 정책이 난무해서도 안 됩니다. 책임 있고 신중한 자세로 국정 운영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는 우스개처럼 대책을 만들지 않는 게 대책인 지경으

로는 가지 말기 바랍니다. 이런 아마추어 정권에 나라를 맡겨 놓아도 되는지 걱정과 안타까운 마음에 국민들과 우리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은 나라를 멍들게 하고 이 정권의 아마추어리즘은 국민들 마음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권을 보면서 사람들은 모택동의 홍위병을 떠올렸지만 저는 문재인 정권을 보면서 모택동의 체사해 운동이 떠올랐습니다. 모택동이 들판의 참새를 보고 ‘저 새는 해로운 새다’라고 교시하자 1955년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모기, 파리, 쥐, 참새를 농업 발전에 해로운 네 가지 것으로 지정합니다. 1958년 이른바 체사해 운동은 전국으로 퍼져 나갔고, 중국 인민은 급기야 참새 2억 마리를 학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참새가 잡아먹던 메뚜기·모기·파리 떼는 급증했고 중국 역사상 최악의 대흉년이 발생했습니다. 아사자만 최대 4000만 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강남 집값 잡겠다면서 자사고·특목고 폐지로 오히려 강남 집값에 기름을 들이붓고 있는 것이 바로 어처구니없는 이 정권입니다.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단기 처방이 남발되면서 부동산시장의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정책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당위에 매몰돼서 현실을 외면하고 실패를 자초하는 어리석음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만 초래했던 신고리 5·6호기와 탈원전 정책은 현실보다 이념을 앞세운 철부지 같은 정책 아마추어리즘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 힘들게 키워 온 국가경쟁력을 이렇게 걷어차 버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송월과 평창 올림픽에 가려서 잠시 잊혀진 듯하지만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위협보다 더

큰 국가적 위기는 없습니다.

올림픽이 만들어 낸 가상 평화는 짧고 복핵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올림픽 전야를 대대적인 군사 퍼레이드로 장식하겠다는 김정은에게 더 이상 무슨 대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남의 집 잔치에 떡 하나 얻어먹는 것도 모자라서 숟가락 엮은 김에 잔칫상마저 통째로 차지하려는 무례를 더 이상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다 된 밥에 재 뿌리고 차려진 밥상 뒤집어엮는 북한의 무력시위를 결코 그대로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이 정권이 올림픽을 앞세워 북한의 오만방자를 그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국제사회와 국민들은 이 정부가 더 이상 북한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 자체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이제는 복핵을 포기시키는 설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핵을 폐기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김정은과 대화를 통해서 핵 포기를 설득시킬 수 있다는 순진하고도 낭만적인 기대는 이제 단호하게 접어야 합니다.

이 정부가 제천 참사와 밀양 참사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던 것처럼 복핵 앞에서도 여전히 속수무책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평창 올림픽이 복핵을 절대 가려 주지 않습니다. 북한이 하자는 대로 끌려만 다니는 올림픽 외교로는 대화도 복핵 포기도 결코 얻어 낼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스스로 비굴해지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김정은의 눈치만 보며 스스로 굽신거리는 굴욕을 자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용감한 국가가 망한 적은 없습니다. 비겁한 국가가 망할 뿐이라는 이 역사의 경험을 문재인 정권은 잘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술핵 재배치는 복핵 위협에 대응하는 가장 실효적인 군사적 대책입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핵 협박과 핵 공갈이 통하지 않게 만드는 현재로서 가장 유효하고 현실적인 대안이자 협상 카드라는 점을 직시해 주기 바랍니다. 남북 간의 핵 균형을 통해서 한반도 핵 폐기 협상에 돌입하는 것만이 파국적인 무력분쟁 없이 핵 문제를 중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는 멈추지 않습니다. 실효성 없는 남북대화론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한반도를 더욱 위협에 빠뜨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기 바랍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그리고 국제사회 공조에 균열과 혼란을 야기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안보는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군 통수권자의 냉정하고 단호한 자세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남과 북 모두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을 제거하기 위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한미 공조가 아닌 민족 공조를 택한 동맹국인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개정과 셰이프가드 같은 무역 압박으로 포괄동맹은 흔들리고 있고 한반도 안보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한미관계의 비극을 알리는 전주곡이 아니길 바랍니다.

대중 3불 정책은 우리의 안보주권을 포기한 사대친중 외교의 시작입니다. 안보주권을 포기하고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선언문조차 채택하지 못한 빈손 정상회담, 자신을 수행한 대한민국 기사가 폭행을 당하는데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이 정권이 대한민국의 정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드 문제를 이름도 모호한 전략적 모호성으로 접근하려 한 결과라는 점을 인식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외교 관례를 무시한 아마추어 외교로 국제적 망신도 자초하고 있습니다.

중동 외교의 중심 UAE와의 외교적 불협화음은 이 정권이 깊이 되새겨야 할 외교적 경험과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 UAE 문제는 언제든지 이 아마추어 정권이 무슨 일을 벌였는지 온 천하에 그 의혹을 해소할 용의도 있습니다.

30년간 비공개로 보존되어야 할 외교문서를 2년 만에 공개했다면 지금이라도 한일 위안부 재협상에 적극 나서기 바랍니다. 위안부 재협상도 하지도 않을 거면서 까뒤집기는 왜 뒤집었습니까?

신뢰는 무너지고 관계는 소원해지고, 아베 총리는 보란 듯이 도쿄 한 복판에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상설 전시관을 개장하고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고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빨리 외교 특사라도 보내서 아베 총리에게 강력하게 항의라

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마추어 외교 협상, 무면허 외교 폭주, 이것이 바로 민심의 거울에 비친 문제인 정부의 자화상입니다.

(「가서 고개 숙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자성하고 반성하면서 제1 야당 원내대표의 대 국민 연설을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내 소란)

이 정권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가 분위기 좀 돌려 보지요.

(「반성부터 하고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문제인 대통령과 집권당 민주당은 호반건설과는 도대체 무슨 관계에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커넥션이 있길래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어제 산업은행은 이사회를 열어서 대우건설 우선협상자로 호반건설을 선정했습니다. 이 정권 출범 직후부터 호반건설이 대우건설을 먹는다는 설이 과다했는데 그 의혹이 어제 현실화된 것입니다.

저는 일찍이 대우건설 매각 문제를 강력히 문제 삼은 바 있습니다. 제1 야당 원내대표가 이처럼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콧방귀도 안 뀌고 보란 듯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삼은 것은 무슨 의도입니까?

작년 정관 개정을 통해서 졸속 매각이 가능하도록 한 조치나 산업은행 지분의 전량 매각 방침이 분할매각 방침으로 전환되는 그 절차와 과정조차도 투명하지 않았습니니다. 국민혈세 공적자금 3조 2000억이나 투입해서 반 토막 1조 6000억에 팔아 제끼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관 개정으로 배임 시비도 꿈수로 이렇게 삭피해가 버렸습니다. 반 토막 할인 매물로 헐값에 폭탄세일 하고, 호반건설 주머니 사정 봐서 분할매각, 할부매각 해 주고, 이 정권 사람들은 자기 집 팔면서도 이런 계약 할 수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다시 묻습니다. 대체 호반건설과 무슨 관계에 있습니까?

(「아무 관계 없어요,」 하는 의원 있음)

문제인 정부가 초래한 사분오열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치 보복, 정책 보복, 인사 보복으로 만들어 낸 문제인 정권의 두 국민 정치는 또 다시 진영

을 나누고 경계를 설정하고 국민들을 편 가르키고 있습니다.

전임 정권을 겨냥해 궤멸적 수준의 청산을 시도하면서 전방위적으로 노골적인 이 정권의 한풀이 보복 정치는 가히 문제인 사회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대중권력을 앞세운 인민재판식 여론몰이로 공론장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진영의 구미에 맞는 문빠 포퓰리즘으로 흥위병 정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앞세워 적대를 부추기고, 대통령이 앞장서서 반목과 증오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안보와 산업화를 통해서 나라의 중심을 지켜왔던 이 땅의 보수를 수구와 적폐로 몰아세우는 문제인 정권의 정치적 목표가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한풀이에 매진하겠다는 것인지, 더 이상 집권자의 위치와 소임을 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나라를 사분오열하는 보복 정치, 두 국민 정치는 이제 적극 그만두기 바랍니다.

KBS·MBC 공영방송 사장을 굴비 엮듯 엮어서 끌어낸 문제인 정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증오는 폭력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분노를 이야기하고, 이 분노는 증오를 낳고, 증오는 폭력을 만들어 냅니다. 나와 다른 것, 내가 속하지 않은 것, 진영의 경계를 넘어섰다는 이유로 이들을 적폐라는 허울에 가두고 국민들에게 더 이상 증오와 분노를 전파하지 말기 바랍니다.

나라다운 나라, 문제인 정권을 만들어 낸 촛불 민심에 화답하는 길이 독단과 전횡의 길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포퓰리즘 독재, 대중 독재의 길은 더더군다나 아닐 것입니다.

문제인 개헌을 넘어, 이제는 포퓰리즘 독재를 넘어서 의회정치를 복원해야 됩니다.

집권 여당에 앞서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대통령이 정국을 주도하는 권위주의적 민주주의를 극복하고 제왕적 대통령 정치를 반드시 넘어서야 합니다. 대통령이 독주하고 정부 여당이 일사분란하게 따라가는 정치는 이제 더 이상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지난 30년, 우리의 역사적 경험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현행 헌법에 따른 권력구조가 제왕적 대통령이거나 아니면 포퓰리즘 독재로 귀결될 수밖에 없

었던 상황을 우리는 여전히 목도하고 경험해 왔습니다. 이것은 권력 운용의 문제라기보다 전적으로 제도적인 요인에서 기인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함정을 그대로 남겨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제왕이 나와서도 안 되지만 국민 눈치만 살피는 포퓰리스트도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보된 이후의 과제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내용을 채워 가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권력이 국민 앞에 정치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87년 우리는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민주헌법을 쟁취했습니다. 공정한 규칙을 절차적으로 제도화하고 국가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 87년 헌법은 이후 30년 동안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정치의 민주적 성숙을 완성해 가는 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완성에 초점을 맞춰 온 이 87년 체제를 발전적으로 극복하고 실질적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데 있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정치사적 과제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나타난 현행의 대통령 중심제를 넘어서 포스트 87년 체제를 담보할 권력의 구조 틀 안에서 어떠한 내용과 가치를 담아 제도로써 그것을 안착시켜 가야 할 것인지 하는 정치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권력구조를 통해서 민주정치 이념을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획득해야 할 공통의 민주적 가치를 실현해 가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권력의 책임성 강화, 선거연령 하향을 통한 참정권 확대, 사회적 민주화에 대한 깊은 철학적 성찰이 새 헌법에 녹아 스며들기를 희망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사회 개혁 정당으로서 선거연령 하향과 사회적 평등권 확대에 결코 소홀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학교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는 취학연령

하향으로 불식해 가도록 할 것입니다.

조기취학은 18세 유권자가 교복 입고 투표하는 상황도 초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영유아 학부모들의 보육 부담을 완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7살 조기취학으로 만 18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선거연령 18세로 인하하는 자유한국당의 사회적 개혁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과 의원 여러분들도 함께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개헌은 2030 미래세대와의 약속입니다. 새 시대를 열어 가는 개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고 분권형 헌법 개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야 할 것입니다. 권력구조 개편과 더불어서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편을 함께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개헌 중심 정당으로서 국민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강화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개헌의 핵심은 어떠한 경우도 권력구조 개편이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개헌은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시발점입니다. 대통령과 정권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들이 만들어 가야 할 과제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권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노동운동 현장에 호소합니다.

노동운동을 권력의 도구로 착취하지 마십시오. 문재인 정권은 노동조직을 더 이상 정권의 하수인으로 매수하지 마십시오. 후안무치한 인민재판식 국정 운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치권력에 빌붙은 노동조직은 결코 노동운동이 아니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는 국정 운영 기술자들이 너무도 많이 포진되고 있습니다. 정치보복 전문가, 반미 친북 전문가, 감성팔이 전문가, 언론 협찬 전문가, 이들이 그들입니다.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견어 내고 제대로 된 참모들로 하루속히 국정 쇄신하십시오. 그 길만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에게 일방적인 구애를 보내는 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경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문재인 정권은 반드시 깨닫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화합하는 올림픽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의장 정세균 김성태 원내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 의원(260인)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창일	강효상	강훈식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미혁
권석창	권성동	권은희	권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김경협
김관영	김광수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두관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金成泰
김세연	김수민	김순례	김승희
김영우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용태	김재경	김재원
김정우	김정재	김종대	김종민
김종석	김중로	김진태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흠	김학용
김한정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김현아	나경원	남인순
노웅래	노회찬	도종환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운	박남춘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박순자	박영선
박완수	박완주	박용진	박인숙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주선
박주현	박찬대	박찬우	박홍근
백승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영교	서청원	서형수	설훈
성일종	소병훈	송기석	송기현
송석준	송영길	송옥주	송희경
신경민	신동근	신보라	신상진
신용현	신창현	심기준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여상규
염동열	오세정	오신환	오영훈
오제세	우원식	원유철	원혜영
위성곤	유기준	유동수	유민봉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재중	윤관석	윤상현
윤소하	윤영석	윤재옥	윤종필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군현	이동섭	이만희	이명수
이수혁	이양수	이언주	이완영
이용득	이용호	이원욱	이은권
이은재	이인영	이장우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희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헌승	이현재
이훈	인재근	임이자	임종성
장석춘	장정숙	장제원	전재수
전해철	전혜숙	전희경	정갑윤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용기	정우택	정운천	정유섭
정재호	정종섭	정진석	정춘숙
정태욱	제윤경	조정태	조배숙
조승래	조응천	조정식	조훈현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영	채이배	최교일	최도자
최연혜	최윤열	최인호	추경호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하태경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	황주홍	황희

○개의 시 재석 의원(184인)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효상	강훈식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미혁	권성동	권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김경협
김규환	김도읍	김동철	김두관
김무성	김민기	김병관	김병욱
김부겸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태	金成泰	김세연	김수민
김순례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용태	김재경	김정우	김정재
김종민	김종석	김중로	김철민
김한정	김한표	김현권	김현미



나경원	노웅래	도종환	문진국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용태
문희상	민경욱	민병두	민홍철	김재경	김재원	김정우	김정재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대출	김종민	김중로	김진태	김철민
박덕흠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김태년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박성중	박완수	박용진	박인숙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김현아
박재호	박정주	박찬대	박찬우	나경원	남인순	노웅래	노회찬
박홍근	백승주	변재일	서형수	도종환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설훈현	성일종	소병훈	송기석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송기헌	송석준	송희경	송신경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범계
신동근	신보라	신창현	심기준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박순자
심재철	안규백	안상수	양승조	박영선	박완수	박완주	박용진
어기구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박인숙	박재호	박정근	박주민
오영훈	오제세	우원식	원유철	박찬대	박찬우	박홍근	백승주
위성곤	유기준	유동수	유민봉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영교
유승민	유은혜	유의동	윤관석	서형수	성일종	소병훈	송기석
윤영석	윤재욱	윤종필	윤한홍	송기헌	송석준	송영길	송옥주
윤후덕	이개호	이동섭	이만희	송희경	신경민	신동근	신보라
이수혁	이양수	이완영	이용득	신상진	신용현	신창현	심기준
이용호	이원욱	이은권	이은재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이인영	이장우	이종걸	이종구	안상수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이종명	이종배	이진복	이채익	여상규	염동열	오세정	오제세
이철희	이춘석	이학영	이헌승	우원식	원유철	원혜영	위성곤
이현재	인재근	임이자	임종성	유기준	유동수	유민봉	유승희
장석춘	장제원	전재수	전해철	유재중	윤관석	윤소하	윤영석
전혜숙	전희경	정갑윤	정병국	윤재욱	윤종필	윤한홍	윤호중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용기	윤후덕	이균현	이만희	이명수
정유섭	정재호	정종섭	정진석	이용호	이언주	이완영	이용득
정춘숙	조배숙	조승래	조훈현	이인영	이원욱	이은권	이은재
진영	채이배	최교일	최도자	이정현	이장우	이재정	이정미
최연혜	최운열	최인호	추경호	이주영	이진복	이재익	이철희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한정애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현승
함진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이현재	이훈	인재근	임이자
홍철호	황영철	황주홍	황희	임종성	장정숙	장제원	전재수

○산회 시 재석 의원(221인)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용태
강창일	강효상	강훈식	경대수	김재경	김재원	김정우	김정재
곽대훈	곽상도	권석창	권성동	김종민	김중로	김진태	김철민
권은희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태년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경수	김경협	김관영	김규환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김현아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두관	나경원	남인순	노웅래	노회찬
김명연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도종환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김부겸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범계
김성찬	김성태	金成泰	김세연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박순자
김수민	김순례	김영우	김영주	박영선	박완수	박완주	박용진
				박인숙	박재호	박정근	박주민
				박찬대	박찬우	박홍근	백승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영교
				서형수	성일종	소병훈	송기석
				송기헌	송석준	송영길	송옥주
				송희경	신경민	신동근	신보라
				신상진	신용현	신창현	심기준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여상규	염동열	오세정	오제세
				우원식	원유철	원혜영	위성곤
				유기준	유동수	유민봉	유승희
				유재중	윤관석	윤소하	윤영석
				윤재욱	윤종필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균현	이만희	이명수
				이용호	이언주	이완영	이용득
				이인영	이원욱	이은권	이은재
				이정현	이장우	이재정	이정미
				이주영	이진복	이재익	이철희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현승
				이현재	이훈	인재근	임이자
				임종성	장정숙	장제원	전재수
				전해철	전희경	정갑윤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용기
				정우택	정운천	정재호	정종섭
				정진석	정태욱	제윤경	조경태
				조정식	조훈현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진영	채이배	최교일
				최도자	최운열	최인호	추경호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하태경
				한정애	함진규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
				황희			

○청가 의원(15인)

김 경 진 김 정 훈 김 중 훈 박 지 원  
 손 금 주 윤 영 일 이 석 현 이 용 주  
 이 철 규 이 혜 훈 장 병 완 정 동 영  
 정 인 화 천 정 배 최경환(국)

○국회 참석자

사 무 총 장 김 교 홍  
 의 사 국 장 권 영 진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 무 총 리 이 낙 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 상 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 영 민  
 외 교 부 장 관 강 경 화  
 통 일 부 장 관 조 명 균  
 법 무 부 장 관 박 상 기  
 행 정 안 전 부 장 관 김 부 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 중 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 영 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박 능 후  
 환 경 부 장 관 김 은 경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김 영 주  
 여 성 가 족 부 장 관 정 현 백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김 현 미  
 해 양 수 산 부 장 관 김 영 춘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홍 중 학

○출석 정부위원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 용 진  
 국 방 부 차 관 서 주 석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 인 호

【보고사항】

○특별위원 개선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재난안전대책특별	정성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2018. 1. 31.

○의안 제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 발의)

(2018. 1. 31. 송영길·김태년·안민석·안규백·고용진·김철민·박남춘·조승래·유동수·윤관석·김영호·전재수·문희상·송옥주·김상희·이춘석·박찬대·임종성·김정우·신창현·유승희·권미혁 의원 발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 발의)

(2018. 1. 31. 송영길·김태년·안민석·안규백·고용진·김철민·조승래·유동수·윤관석·전재수·김영호·문희상·송옥주·김상희·이춘석·박찬대·임종성·김정우·신창현·유승희·심기준·권미혁 의원 발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 발의)

(2018. 1. 31. 김광수·조배숙·박지원·천정배·윤영일·박주선·유성엽·장병완·김경진·최경환(국)·김종희·정동영·유동수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 발의)

(2018. 1. 31. 김기선·함진규·원유철·경대수·김무성·염동열·윤상현·이채익·김성찬·이양수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 발의)

(2018. 1. 31. 송영길·김태년·안민석·안규백·고용진·김철민·박남춘·조승래·유동수·윤관석·김영호·전재수·문희상·송옥주·김상희·이춘석·박찬대·김정우·신창현·유승희·심기준·권미혁 의원 발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 발의)

(2018. 1. 31. 이학영·박광운·최인호·윤관석·김해영·진선미·이찬열·전해철·최운열·박용진·박찬대·양승조 의원 발의)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이학영 의원 대표 발의)

(2018. 1. 31. 이학영·이원욱·윤호중·정춘숙·한정애·이춘석·김정우·이재정·최인호·박정 의원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 발의)

(2018. 1. 31. 이종명·김성찬·조훈현·박찬우·김학용·김규환·조경태·김선동·김종석·신상진·신보라 의원 발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 발의)

(2018. 1. 31. 이동섭·황주홍·이찬열·고용진·김삼화·채이배·최도자·유동수·박준영·이용호·민홍철 의원 발의)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 발의)

(2018. 1. 31. 이종명·김성찬·조훈현·박찬우·김학용·김규환·조경태·김선동·김종석·신상진·신보라 의원 발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

(2018. 1. 31. 한정애·강훈식·고용진·김성수·김정우·소병훈·신창현·유동수·윤관석·이철희·정성호·표창원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2018. 1. 31. 김명연·강석진·김무성·김성원·김태흠·민경욱·박덕흠·박맹우·박인숙·이양수·임이자·정유섭 의원 발의)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2018. 1. 31. 노회찬·이정미·김종대·김영호·윤소하·심상정·추혜선·진선미·정동영·김종훈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2018. 1. 31. 노회찬·이정미·김종대·김영호·윤소하·심상정·추혜선·진선미·정동영·김종훈 의원 발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018. 1. 31. 박인숙·조배숙·김세연·이명수·하태경·정성호·김종희·김성원·김석기·정병국 의원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2018. 1. 31. 유의동·홍철호·최연혜·이학재·지상욱·유승민·정병국·오신환·이동섭·김도읍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

(2018. 1. 31. 김성찬·박찬우·홍문표·윤한홍·이종명·김재경·이명수·김석기·박완수·지상욱 의원 발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

(2018. 1. 31. 김성찬·박맹우·홍문표·조경태·김재경·이명수·김석기·문진국·성일종·지상욱 의원 발의)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관리에 관한 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8. 1. 31. 이찬열·민병두·황주홍·최도자·이동섭·강병원·홍의락·정동영·박정·백재현 의원 발의)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

(2018. 1. 31. 최연혜·곽대훈·이채익·염동열·김정재·정운천·유의동·김규환·김도읍·

이진복·박명재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18. 1. 31. 강병원·신창현·이해찬·김정우·이정미·윤관석·이용득·송옥주·박찬대·유동수·노웅래·정성호 의원 발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

(2018. 1. 31. 윤영일·정인화·주승용·황주홍·이동섭·박준영·신용현·이용주·김철민·장병완 의원 발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18. 1. 31. 백혜련·강병원·이학영·김현권·이춘석·오영훈·박완주·남인순·윤호중·박광온·윤영일·최인호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18. 1. 31. 강병원·백혜련·김병욱·민병두·임종성·윤후덕·김경협·이찬열·강훈식·박용진·송옥주·신창현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2018. 1. 31. 신경민·박정·권칠승·김성수·이찬열·김해영·박광온·정재호·기동민·박찬대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18. 1. 31. 백혜련·강병원·이학영·박완주·남인순·윤호중·박광온·윤영일·이재정·김영진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2018. 1. 31. 박용진·정성호·민병두·윤관석·고용진·박찬대·윤호중·채이배·박완주·김병욱·홍의락 의원 발의)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18. 1. 31. 정부 제출)

이상 29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 ○의안 철회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2018. 1. 19. 이학영·이원욱·윤호중·정춘숙·최인호·이춘석·김정우·한정애·이재정·

박정 의원 발의)

1월 31일 발의자 철회 요구

○계획서 제출

**2018년도 법률안 국회 제출계획**

(2018. 1. 31. 정부 제출)

○서면답변서 제출

**국회의원 자료요구 내용의 기자실 유출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18. 1. 31. 정부 제출)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서 제출

**국회감사요구사항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 특혜 제공, 납품된 확성기의 성능  
및 업체의 부당이득 취득 의혹에 대한 감사」  
감사결과보고서**

(2018. 1. 31. 감사원장 제출)

1월 31일 국방위원회에 송부